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00
----------	------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일

발의자: 김종환, 안광림, 추선미, 황금석,
박주윤, 민영미, 김장권, 김보석,
구재평(이상 9명)

□ 주 문

-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안이유

- 2020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2023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금융시장이 큰 위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야 간 합의로 2025년 1월로 시행을 유예하였음.
- 그러나 지난 유예 기간 동안에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 등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다수가 2040 청년 세대에 속하므로,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는 필요함.
- 이에 과도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부총리), 국세청(국세청장)

○ 붙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1부. 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개인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침체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2020년 도입 이후 여러 전문가와 투자자, 여야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유예기간 종료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금투세 폐지라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금투세는 당초 조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저평가와 경기 침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예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 이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8년 대만 정부가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주가가 한 달 만에 30% 폭락하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 외에 다양한 주식 세금을 폐지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증권거래세에 금투세까지 부과한다

면, 과도한 세금 정책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개인 투자자의 소득 창출 기회를 방해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폐지 요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회복과 2040 청년 세대의 생애 소득 형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 및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4년 11월 일

성남시의회